

“전북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업무보고
익산 A학교 B교사 사건 관련
‘상치교과’ 전수조사 주문
자유학기제 제공 등도 요구



미세먼지 저감 도·시군 협력강화 회의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미세먼지 저감 도·시·군 협력강화 회의에 이승복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을 비롯한 시군 환경과장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응계획 등 도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회의를 갖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5일 제350회 임시회 전북도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변화된 교육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도내 교육현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돌아다보면 도내 교육현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다. 학생인권과 교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환경과 교육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도교육청 예산의 자원배분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용처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예산이 필요한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교육청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나? 다시한번 도내 교육현장에서 상처교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자유학기제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

하고, 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에 대해 옳은 전달을 하지 못해 이벤트성이 짙다”면서 “진정한 자유학기제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폐기하고 새로이 구입하고 있고, 객결상 구입도 마찬가지”라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행자위·농산경제위 올 상반기 업무보고

“도내 인구감소 대안 절실”

행자위 강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철)는 5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전보연구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도민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홍보를 하지 않은 채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서명 실적이 저조하므로 도민들에게 분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명을 추진하도록 강조했다.

김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도가 최근 4년간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노력 등 일자리창출에 대한 공약 및 고민이 미흡하여 청년층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17년의 경우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전북도를 떠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전북도의 인구유입 노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영 부위원장(전주2)은 “국가

차원이든 도 차원이든 출산저조에 따른 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인구정책 및 여성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관련 영역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전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연구원 2017년도 결원 2명이 있었고, 현재 원장과 연구직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원에 과부하를 걸리게 해 고스란히 전북도 및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장과 연구원의 결원 충원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고, 연구원이 본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청년층 등 주도층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북 내에서 14개 시군을 포함한 균형 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제는 전주 등 특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도의 주요 투자 및 기업유치가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농촌의 농공단지 등에 대해서 식품기업 유치 등을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봉 의원(비례)은 청년, 중장년,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도내의 대기업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는 도내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내 주력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전주시가 농산물 원산지를 숙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설을 앞두고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와 육류, 나물류 등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세트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무리한 도시계획 사유재산권 침해 원인”

문건위, 업무보고서 대책 주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5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완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건설

교통국 소관 도정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목을 끌었으며, 업무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완 의원(완주2)은 자동차 보급률에 비해 우리 교통문화가 미흡함을 강조하며 “선진국형 교통문화로 진입하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생활화 하는 등 변화가 필요

하며 교통문화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시스템 구현에 교통문화연수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빈 의원(장수)은 “다소 무리한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청년 창업 선도 대책마련 필요”

농산경제위 강조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5일 전북도 경제산업국, 경제통상진흥원, 예코융합성유연구원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들었다.

농산경제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백경태 의원(무주)은 인구 감소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은 지난해보다 올해 전북 경제가 더욱 어렵다고 보이는데, 특히 군산GM 등 자동차 산업 위기,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만 의원(군산1)은 GM 군산공

장 문제에 대해 호주, 멕시코 등의 해외시장을 언급하며 올해 군산공장의 폐쇄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도의 주요 투자 및 기업유치가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농촌의 농공단지 등에 대해서 식품기업 유치 등을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봉 의원(비례)은 청년, 중장년,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도내의 대기업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는 도내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내 주력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전라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

도선관위, 지선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공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산사업주 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공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 입설을 불량로 주변 도심지 미관개선을 위한 지중화
2. 지중화 확정지역 : 시계탑 삼거리 ~ 이룸주택 사거리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5월
4. 신·증설 고객의 지중공급 시행 기준일 :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약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이면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마다름 골목)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까지의 가공설비
7. 고객 안내사항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약관 및 신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증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2월 6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